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쌀 우선지급금 197억 환수...농민 부글부글

사상 초유...농가당 7만8천원·전남 49억원 추산

“농가소득 감소 대책이 먼저” 환수 거부 움직임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농민에게 판매 예상가를 추산해 우선 지급한 후 실제 매입가에서 발생한 차액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쌀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수매에 응한 농가들에 준 우선 지급금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우선 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한 돈이다. 이 돈은 지난해 8월 1등급 40kg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5000원에 책정됐다. 그러나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 결국 포대당 860원 차액이 발생했고 농민들은 이미 받은 돈 가운데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등급별 차액은 특등 890원, 2등 820원, 3등 730원이다. 전국적으로 환수 금액은 모두 197억

2000만원, 농가당 7만8000원 가량이다. 전남에서만 6만1000 농가가 49억원 가량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우선 지급금 가운데 쌀값 하락으로 발생한 차액을 돌려받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농가소득 감소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환수에만 급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농가별 액수를 확정해 다음달부터 농협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환수거부 투쟁에 나설 태세여서 농협도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감소에 시름 하는 농민의 동요를 고려해 우선 지급금 책정 방식을 바꾸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환수액을 앞으로 농민이 받게 될 직불금에서 상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변동 직불금 등을 지급할 때 환수액만큼 상계처리하는 내용으로 농민의 위임을 받는 등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제 논리상 환수가 타당하지만, 농민들은 수중에 들어온 돈을 내놓아야 하니 반발이 예상된다”며 “다음달 고지서가 농가에 전달되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절충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22개 시군

무기계약직 305명 신규 채용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올해 무기계약직 34명과 271명 등 모두 305명을 신규 채용한다. 전남도는 5일 “무기계약직 공표시행계획에 따라 현재 전남도 166명, 22개 시·군 4549명 등 4715명인 무기계약직이 5020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이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기계약직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공표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무기계약직 운용 인원을 누리집에 각각 공표했으며, 총 인원 범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력을 채용해 운영할 방침이다. 무기계약직 공표시행 계획은 그동안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무기계약직이 무분별하게 채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남도가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

광주시 산하 기관장 출사표

도시공사 조용준 사장 등 9명 사의 표명

윤장현 광주시장이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섰다는 보도<광주일보 5일자 2면>에 따라 관련 기관장들의 출 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의 인적 쇄신 의지에 따라 이날 현재 주요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조용준 사장 ▲광주 도시철도공사 정선수 사장을 비롯한 출 연기관인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 이사 ▲장혜숙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정석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재신 광주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장 ▲김봉태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준문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장 등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5곳의 공기업·출연기관이 시의회 인사 청문회 대상 기관일 정도로 비중이 큰 자리이기도 하다. 이들은 대부분 윤 시장 임기 시작과 함께 취임한 기관장들이며, 윤 시장의 지인이거나 선거 캠프 인사들이다. 윤 시장은 이들의 사표를 선별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례를 찾기 힘든 고강도 인적 쇄신은 민선 6기 출범 뒤 발목을 잡았던 공공기관장의 보은, 측근인사 논란을 잠재우고 인적비리의 명예를 털어내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김용구 전 정책자문관 등 인적 비리로 촉발된 비서실장 등 정무직 인적 쇄신에 이어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올해 시정 비전과

과제로 꼽은 ‘공감 행정’으로 새로운 시정 분위기를 만들어보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윤 시장은 지난해 10월, 박용수 비서실장과 노성경 정무특보 등 정무직 라인에 대한 사표를 받았다. 특히 윤 시장은 이번 인적쇄신을 통해 이들 공공기관장을 맡 그대로 전문가 집단으로 재편해 측근, 보은인사 논란 자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더 이상 사표를 제출하는 기관장은 없을 것”이라며 “이들 가운데 사표를 선별 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시장이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인적쇄신 이후에도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최권일기자 cki@

최순실 “억울하다”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정유라 ‘범죄인 인도’ 본격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재판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추가로 진술할 기회를 주자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재판부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범무법인 동북아)는 “최씨는 대통령, 안 전 수석과 3차 공모해 미르·K스프츠재단에 모금을 하려고 공모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대통령을 공모관계 중개인으로 넣어 범

률적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같은 맥락에서 최씨는 16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연금 모금에 관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두 재단 설립 때부터 현재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금전 등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구금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를 국내로 압송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5일 “오늘 오후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절차에 따라 외교부에 전달했으며, 동시에 덴마크 검찰에도 직접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접수한 외교부도 외교재널을 통해 덴마크 사법당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후보지 3월까지 선정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의 방공포대 이전 후보지를 오는 3월까지 선정하기로 하는 등 세부 작업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5일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추진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자문단은 방공포대 이전 후보 대상지를 국방부에 추천하기 위해 구성된다. 주민대표와 시·구 의원, 관련단체,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돼 오는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자문단에서 추천한 예비 후보지를 놓고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안에 이전 후보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軍) 작전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에 ‘광주 군공항’을 포함해 이전후보 대상지 3곳을 추천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방부가 사실상 군 공항을 예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언급한 점으로 미뤄 이전 후보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공항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적합하고 평지도 작전상 큰 무리가 없다는 점, 대체 부지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 해소 등 장점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사업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군 공항에 방공포대 등 기피시설만 모아놓은 셈이 될 수 있어 공항 주변 주민의 반발 우려된다. 또 군 공항 이전을 광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면 7~8년 뒤 다시 방공포대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적절성 논란도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영란법’ 명절선물 상한 올라갈까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건의...정부 “검토”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설·추석 선물에 별도의 상한을 부여해달라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나와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한 외부 전문가는 “서민 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탁

금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토론 참석 전문가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환 등은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화환에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등록번호: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화제의 상가 분양] 적은 투자로 매달 따박 따박 월 임대료 받으세요~

광주 투자자들 선호하는 **Homeplus**와 **CGV***1층상가 12월 오픈 예정!

1층 수평형 Mall+56% 테라스 설계/**고객순환형 동선설계**+일반상가 보다 높은 **6m 층고**

▶예상 수익률 표

계약면적	21.83 (구)평	계약면적	25.47 (구)평	계약면적	35.64 (구)평
실투자금	207,400,000	실투자금	273,000,000	실투자금	298,800,000
보증금	20,000,000	보증금	30,000,000	보증금	30,000,000
월 임대료	1,800,000	월 임대료	2,400,000	월 임대료	2,600,000
년 임대료	21,600,000	년 임대료	28,800,000	년 임대료	31,200,000
대출시 연수익	16,294,000	대출시 연수익	21,730,000	대출시 연수익	23,528,000
수익률(예상)	7.9%	수익률(예상)	8.0%	수익률(예상)	7.9%

※대출 40%, 금리 3.5% 기준

분양문의

062)412-2237